

"중국위협론"의 사상적 배경에 대한 고찰

-- "문명충돌론"과 "민주평화이론"을 중심으로

김 중 섭*

목 차

- I. 머리말
- II. "문명충돌론"-- '서방국가(The West)' 대 '비서방국가(The Rest)'의 구도
- III. "포스트 모던"국가 대 "현대"국가의 구도
- IV. "민주 평화이론"-- '민주'국가 대 '비민주'국가의 구도
- V. 결 론

I. 머리말

소련의 붕괴와 함께 냉전은 종식되었고, 2차대전 후 미·소 두 강대국의 대립으로 규정되었던 국제정치의 구도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새로운 세계 구도에서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국제적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소련의 붕괴 후 유일한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였지만 한편으론 자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음을 느끼고있다. 포스트 냉전 시기에 미국은 어떠한 세계전략을 취해야 하는가? 미국은 일본·유럽·러시아·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어떠한 조정을 해야만 하는가?

냉전이 종식될 무렵, 미국에서는 이른바 "중국위협론"에 대한 논쟁이 일기 시작했다. 중국은 미국의 가장 큰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되었으며, 양국의 정치·경제·군사적 대립은 점점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었다. 1990년대부터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타임즈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적대적인 입장에서 중국의 인권문제와 티베트 문제, 대만 문제, 군비문제 등을 거론했다.¹⁾

이러한 현상들은 아마 현실주의 국제관계이론으로 설명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소련 해

*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중과 조교수

1) Richard Bernstein과 Ross H. Munro 두 기자가 공저한 『다가오는 중국과의 충돌』은 이러한 여론을 집대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Richard Bernstein & Ross H. Munro. *The coming conflict with China* (New York : A.A. Knopf, 1997).

체 후, 미국은 더 이상 중국과 손을 잡고 소련을 견제하는 전략이 필요치 않게 되었다. 따라서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현실주의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인권문제·티베트문제·대만문제 등이 속속 불거져 나왔고, 경제, 무역 측면에서도 고도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은 계속 미국과 마찰을 빚게 되었다.²⁾

그러나 현실주의의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 개념으로는 소련이라는 위협이 없어지고 경제무역 등 분야에서 마찰이 생기는 비슷한 상황이 왜 미국과 서유럽의 전략 관계에는 같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때 저명한 정치학자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이란 글에서 하나의 해답을 제시했다. 즉, 문명이 같기 때문에 서유럽과 미국은 미국과 중국 같은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많이 거론되고 있는 "중국위협론"에 더 그럴듯한 이론적인 바탕을 제시해 주었고,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필연적인 결과로 보이게 하였다.

비록 "문명충돌론"처럼 이슈화되진 못했지만, 서구, 특히 미국의 학자와 정치계 인사들의 머릿속에 더 깊게 뿌리 박혀 있는 또 하나의 해석은 바로 "민주적 평화이론"이다. 이 이론은 민주국가는 평화를 사랑하지만 전제국가는 침략적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민주국가는 전제국가의 위협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이론은 사상적 배경과 정책적 견해에 있어서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두 이론 모두 세계를 서방국가와 비서방국가의 대립구도로 설정하고, 비서방국가를 세계 안정을 위협하는 '악'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이론은 일종의 서방중심주의적인 의식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새 천년을 맞으면서도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는 기존의 티베트, 대만문제, 무역마찰 등 고질적인 문제 외에도 유고 중국대사관 오폭사건, 정찰기 압류사건 등 돌발사건이 이어지면서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비록 911테러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미국이 중국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보는 것은 변함이 없다.

미국의 "중국위협론"에 대한 연구는 경제, 군사 등 수많은 다른 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연구주제이다. 필자는 서구중심적인 사고방식도 한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따라서 이러한 서구중심주의 사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고찰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일부 이론에 대한 비교를 통해 서구중심주의가 어떻게 중국을 비롯한 비서방국가를 위협

2) Harry Harding이 지적하기를, 개혁 개방 이전 폭력이 난무했던 문화대혁명 시기에 미국은 중국에 어떠한 인권에 관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 웨이징성(魏京生)이 '민주의 벽' 사건으로 투옥된 1980년에 미국의 연도인권보고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고, 1979년 달라이라마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어떠한 미국 정부인사도 그를 접견하지 않았다. 이는 90년대와 비교해 볼 때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See Harry Harding, *A Fragile Relationship-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ince 1972* (Washington : Brookings Institution, 1992), pp.198-199.

시하게 되었는지 분석해보려 한다.

II. “문명충돌론”-- ‘서방국가(The West)’ 대 ‘비서방국가(The Rest)’의 구도

저명한 정치학자 헌팅턴(Sameul P. Huntington)이 “*Foreign Affairs*”지에 “문명의 충돌?(The Clash Civilization?)”³⁾이란 글을 발표한 후에 이른바 “문명충돌론”은 곧 국제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의 대상이 되었다. 그 후 헌팅턴은 계속해서 “문명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⁴⁾와 “서구는 독특하지만 보편적이지 않다”⁵⁾를 계속 발표함으로써 “문명충돌론”을 지지했다. 또 이러한 논점들을 정리 보충한 후 “문명의 충돌과 세계질서의 재건”⁶⁾이란 책을 발표하였다. 그는 세계정치는 소련의 해체와 냉전 종식과 함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과거 세계 정치를 관찰하고 해석하는 데 사용되었던 이론들은 시급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의 이론은 바로 간단한 새로운 모델로써 중요한 사건을 해석하고 이로써 과거의 냉전적 모델을 대신하고자 하는 것이다.⁷⁾

그는 인류역사의 새로운 단계에서 충돌은 피할 수 없으며 충돌의 근원은 더 이상 이데올로기적인 요소와 경제적인 요소가 아니며, 인류를 이끌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분쟁과 충돌의 요소는 문화적인 차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로 다른 문명간의 갈등이 과거의 국가와 국가 간의 대립관계를 대신하게 될 것이며 세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고, 문명의 충돌이 세계의 정치 구도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우선 인류 역사에 나타난 충돌 주체의 변화에 대해 설명을 했다. 서기 1500년 이전에는 지리적 차단으로 인해 문명간 접촉이 몹시 제한적이었고 대부분의 상업과 문화의 상호 영향 및 군사적인 분쟁이 모두 같은 문명 내에서 진행되었다. 서구의 세력이 부상하면서 17세기 이후 인류문명은 서구 문명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과거에 다른 문명간의 우발적이고 제한적인 접촉은 점차 서구문명이 기타 문명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압적이며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형식에 의해 대체되었다. 서구가 확립한 국제질서는 세계 질서가 되었

3) Sameu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 *Foreign Affairs*, Vol.72, No.3 (summer, 1993), pp.22-49.

4) Sameul P. Huntington, “If Not Civilization, What? Paradigms of the Post-Cold War World.” *Foreign Affairs*, Vol.72, No.5(11/12 1993), pp.186-194.

5) Sameul P. Huntington, “The West, Unique, Not Universal.” *Foreign Affairs*, Vol.75, No.6(11/12, 1996), pp. 28-46.

6) Sameu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 and the Remarking of World Order*. (New York : Simon & Schuster, 1996)

7) Sameul P. Huntington, “If Not Civilization, What?” p.191.

다. 이 시기의 충돌은 어떠한 형태인가?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 (Peace of Westphalia)에서 근대의 국제제도를 확립한 이후, 서구세계의 분쟁은 주로 왕족들 사이에서 발생했다. 프랑스 대혁명에서 제1차 세계대전까지는 거의 민족국가간의 충돌이었다. 러시아 혁명에서 냉전 종식까지는 군왕의 충돌이나 민족국가의 충돌이 아닌 이데올로기의 충돌이었다. 그리고 국왕들의 충돌이든, 민족국가간의 충돌이든, 이데올로기의 충돌이든, 기본적으로는 모두 서구 문명 내부의 충돌이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이 되자 서구 문명은 더 이상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하지 못하고 세계의 힘의 구조도 역시 서구가 일방적으로 전 세계와 기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아니었으며 여러 문명이 공존하고 서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단계에 접어들었다.⁸⁾

왜 문명간에는 충돌이 생기는 것일까? 헌팅턴은 여섯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문명의 차이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어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차이 혹은 정권형태의 차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금방 사라지지 않는다. 둘째, 세계의 거리가 좁혀지면서 다른 문명간 교류와 영향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교류는 오히려 다른 문명간의 이질성과 문명 내부의 공통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켜 자기 문명에 대한 동질감과 다른 문명에 대한 적대감을 가중시킨다. 셋째, 세계 경제의 현대화와 사회의 변동은 지역사회나 민족국가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경향이 약해지고 더 높은 단계의 종교·문명을 통한 정체성 확립이 이러한 공백을 대신한다. 넷째, 서구국가가 계속 세계 권력구조의 정상(頂上) 위치를 독차지하여 비서구 문명의 주체의식을 강화시킨다. 다섯째, 문화의 특징과 차이는 정치 혹은 경제적 문제보다 타협하거나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여섯째, 세계경제의 블록화 현상은 그 지역 문명에 대한 자아의식을 강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론 공통적인 문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만 그 지역경제공동체가 성공할 수 있다.⁹⁾ 이러한 논점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걸프전과 보스니아 내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 터키와 나토(NATO)의 갈등을 예로 들며 문명간 충돌이 이데올로기와 기타 형식의 충돌을 대신해 세계의 중요한 충돌 형식이 되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그의 논술 중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서구 기독교와 민주화 관계에 대한 견해이다. 사실 그는 『제3의 물결 : 20세기 후반의 민주화』에서 이미 기독교와 민주화의 관계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그 책에 나온 논술에 의하면, 거의 모든 “제3의 물결”의 민주화는 모두 기독교와 관련이 있으며¹⁰⁾, 유교와 이슬람 문화가 민주화에 장애가 될 것임을 우려하고 있다¹¹⁾. 그러나 그는 민주화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유교사상이

8) Sameu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 and the Remarking of World Order*. pp. 44-51.

9) Sameu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 pp. 25-28.

10) Sameul P. Huntington. *The Third Wave : Democratization in the Last Twentieth Century* (Norman :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pp. 76-87.

경제발전에 방해가 된다'는 명제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듯이, 유교사상과 민주주의 관계에 대해 “〈특정 문화가 어떠한 발전의 영원한 장애다〉라는 식의 명제는 마땅히 의심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¹²⁾.

그러나 불과 몇 년 후, 『문명의 충돌과 세계질서의 재건』에서 그의 낙관적인 예측은 거의 사라졌다. 그는 여전히 기독교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강조했고, 심지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까지 했다¹³⁾. 그러나 더 이상 기타 문명의 민주화에 대해서는 기대를 품지 않았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는 서구의 독특한 가치로 온 세계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편적인 권력이 있어야만 보편적인 문화가 만들어 질 수 있으며, 서구 권력이 약해질 때는 서구의 자유와 민주·인권 등 가치도 역시 그 매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또 비록 비서구 사회가 서구식 민주제도를 채택한다 하더라도 국수주의, 전통적 가치의 대두, 종교의 원리주의자의 득세 등의 결과만 낳을 뿐이라는 것이다¹⁴⁾.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는 서구가 다른 문명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바라지 않고 단지 서구 세계가 그 영역을 고수하여 다른 문명에 '오염'되지 않기만을 바란다고 한다. 그는 미국을 예로 들었다. 문화다원주의자가 '다원(多元)'이라는 이름으로 비주류 집단(주로 소수 민족)을 통한 정체성확립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비서구 문명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만약 그들의 뜻대로 된다면 미국은 더 이상 통합된 국가로서 존재하기 힘들고 소련처럼 견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한편으로 문명간의 전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서구의 가치를 세계로 보급하려는 시도를 '잘못됐고 비도덕적이며 위험한 것'이라고 강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은 '대서양주의' 정책을 취해 유럽의 파트너와 긴밀한 협력을 함으로써 그들이 공유하는 독특한 문명과 가치를 보호할 것을 제의했다¹⁵⁾.

헌팅턴의 관점은 발표되자마자 곧 대단한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대부분 반발에 가까웠

11) Sameul P. Huntington, *The Third Wave : Democratization in the Last Twentieth Century*, pp. 328-336.

12) Sameul P. Huntington, *The Third Wave : Democratization in the Last Twentieth Century*, p. 337.

13) 헌팅턴은 동유럽이 공산주의를 포기한 후, 시장경제와 민주정치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분계선이 바로 기독교와 동방정교의 분계선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한국과 대만이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기독교도의 영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Sameu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 and the Remarking of World Order*, p.215, p.259, p.319.

14) Sameu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 and the Remarking of World Order*, pp. 112-119.

15) Sameu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 and the Remarking of World Order*, pp. 426-435.

다. 어떤 이들은 국가간의 충돌은 문명이 아닌 실질적 이익에 기인한다고 여겼고, 어떤 이들은 헌팅턴의 문명 구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어떤 이들은 역사적으로 문명은 서로 융합되는 것이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고 역설하였다. 특히 중국학자는 헌팅턴이 지적한 “유교-이슬람 반서방 연대”에 끼어 있고 서방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더욱 심기가 불편하다.¹⁶⁾

중국학자들의 주로 논의한 것은 “문명충돌론”이 현실 국제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이다. 한 중국학자는 “헌팅턴의 논조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가지고 있어, 중국의 좌경 이데올로기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아니면 민족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의 반서방 정서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¹⁷⁾. 또 어떤 학자는 헌팅턴의 “문명충돌론”은 서구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기보다는 서방세계의 우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고 지적했다¹⁸⁾. 또 어떤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헌팅턴이 겨누고 있는 것은 세계의 유교나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 미국 내의 흑인과 히스패닉계, 아시아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문명 충돌의 전쟁터는 전 세계가 아니라 미국 내에 있다는 것이다. 즉, 헌팅턴은 미국이 점차 다원화되고 있음을 느꼈고 어느날 WASP (White Anglo-Saxon Protestant : 앵글로색슨계 백인 신교도)가 미국을 지배하는 시대가 사라질 것을 염려했던 것이었다¹⁹⁾.

III. “포스트 모던”국가 대 “현대”국가의 구도

그렇다면 헌팅턴이 같은 서양 문명에 속하면서 마찬가지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본 서유럽은 냉전 종식 후 세계 구도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냉전이 종식된 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Economist*)지는 한 외교 정책에 관한 논평에서 한 영국 외교관의 탈냉전 시대의 국제 관계에 대한 저술을 소개하였다.²⁰⁾ 이 논평은 유럽

16) “문명충돌론”에 관한 논평은 그야 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미국 학계의 의견은 *Foreign Affairs*, Vol.7, No.4 (9/10, 1993)에 실린 특집 토론을 참고할 수 있고, 중국 학계의 의견은 王緝思 主編, 『文明與國際政治－中國學者評亨廷頓的文明衝突論』(上海：上海人民出版社, 1995)을 참고할 수 있다.

17) 陳小明, “利益認同的模式轉換”, 王緝思 主編, 『文明與國際政治－中國學者評亨廷頓的文明衝突論』, p. 325.

18) 金觀濤, “西方中心論的破滅－評全球文化衝突論”, 『二十一世紀』(香港), 1993年 10月號, p.22.

19) 王緝思, “文明衝突論戰評述”, 王緝思 主編, 『文明與國際政治－中國學者評亨廷頓的文明衝突論』, pp. 47-48; 李慎之, “亨廷頓想說但不敢說的事”, 『明報月刊』(香港), 1997年 4月號, p.74.

20) “Foreign Policy-Not Quite a New World Order, More a Three-Way Split.” *Economist*, 1997/

연맹의 외교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부 서유럽 인사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고, “문명충돌론”과 비교할 때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발견 할 수 있다.

그 글은 역시 같은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다. 1989년 냉전이 종식된 후 사람들은 자유민주 제도와 시장경제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 받은 듯했다. 그러나 실제로 세인은 오히려 보스니아·소말리아·르완다 등 지역의 끔찍한 살육을 목격해야만 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해야 하는가? 더 나아가 어떻게 이러한 세계 정세에 대처해야 하는가?

그 글에서는 Robert Cooper라는 영국 외교관의 관점을 소개했다. Cooper는 1989년에 냉전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유럽의 국제관계를 지배해온 “힘의 균형의 시대”가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포스트 냉전”, “포스트 힘의 균형”의 시대에 지구상의 국가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전근대적(pre-modern)’ 국가로, ‘혼란/무질서’(chaos)를 특징으로 한다. 두 번째는 ‘현대(modern)’ 국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가이고, 국가의 ‘주권’을 최우선시 한다. 세 번째는 ‘포스트 모던(post-modern)’ 국가로, 국가의 주권을 양보하고 다자간, 상호적인 주권 간섭행위에 굴복한다는 것이 이런 국가의 특징이다.

이러한 분류에 대해 Cooper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원시시대에 인류는 ‘혼란(chaos)’과 ‘질서(order)’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고, 이때 ‘질서’를 선택한다는 것은 고대 제국(帝國)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오늘날에 ‘제국’이란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이 내포되어 있지만 알렉산더 제국, 고대 중국, 고대 로마 시기에 제국의 범위에 속했다는 것은 법률과 문화 문명을 누렸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국의 범위 밖에 있었다는 것은 곧 무질서와 야만적인 상태를 뜻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국을 건설한 목적이 결집과 단결, 통일을 위한 것이었지 변화와 진보를 촉진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유럽의 발전과 개혁의 원천이자 쿠퍼가 인류문명에 대한 유럽 문명의 유일한 공헌이라고 보았던 것은 작은 국가, 즉 민족국가이었다. 소국(小國)은 경쟁을 가져왔고 따라서 진보가 수반되었지만 동시에 전쟁도 가져왔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는 경쟁적인 환경 아래서는 모두 침략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바로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 메커니즘이었다. 한 국가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면 나머지 국가들은 연합하여 그를 견제하는 것이다. 이 메커니즘은 1648년 ‘30년 전쟁’이 끝나고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을 체결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작동되었고, 이것이 1871년 게르만이 통일되어 강대국이 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독일이 통일한 후 그 힘은 기타 유럽 국가들이 견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미국과

소련이 유럽의 사무에 개입하기에 이르렀다. 이 두 강대국은 유럽 사무에 개입한 이후 계속 손을 떼지 않았고 나아가서 유럽의 '힘의 균형'의 구조를 바꿔 놓았다. 1945년부터 1989년까지의 냉전 시기는 유럽의 과거 '힘의 균형'의 변종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다자간의 '힘의 균형'에서 두 강대국간의 '공포 균형(balance of terror)'으로 변화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쿠퍼는 20세기 초에 '힘의 균형'의 메커니즘은 이미 어려움에 빠졌다고 지적한다. 20세기 초에 이르자 과학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전쟁의 대가가 이미 어떤 국가도 감당해낼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 및 민주정치는 '힘의 균형' 메커니즘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밀 외교를 점점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 (1914~1945년은 또 한 차례의 30년 전쟁으로 볼 수 있다)은 한편으론 유럽 국가가 해외에 건설한 식민제국들을 파괴시켜버렸고, 동시에 전통적 개념의 '힘의 균형'을 종결지었으며, 유럽 국가가 '포스트 모던' 국제 관계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였다. 소위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이러한 국가들이 이미 주권 문제의 굴레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이 국가들 간에서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은 서로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의 국방·군사를 제한하고 감독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유럽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57년 '로마조약'에서부터였다.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이 '현대'적 유럽 국제관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처럼 로마 조약은 '포스트 모던'의 유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²¹⁾

안보 문제에서 이러한 포스트 모던 국가들은 힘의 균형에 의존하지 않고 서로의 군사력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과거 권력 균형의 체제 아래서, 서로가 잠재 적국의 군비 상황을 속인 것과는 다르게 포스트 모던 국가들은 상호 제약을 가하고 상호 사찰을 개방함으로써 목표로 삼은 제한 기준에 접근하고 있다. 개방과 투명화는 신뢰의 원천이 되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1975년 헬싱키 협정, 즉 오늘날의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의 전신에서 확립되었다. 이것은 전통 재래식 무기 시대와는 상반되는 핵무기 시대의 안보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자신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함께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러한 종류의 개념은 우선 핵무기와 '포스트 모던' 국가에 적용되고, 더 나아가 화학 무기 및 일부 '현대' 국가에도 확대될 수 있다. 또 원래 군사 영역에만 적용되었던 상호 감독과 사찰은 기타 영역으로도 확장된다. 유럽 의회가 관여하는 사항들은 각 회원국의 선거의 공정 여부, 인권 상황, 각국의 재정 및 화폐정책의 감독 등이다. 다시 말해 '포스트 모던' 국가에서 내정과 외교 업무의 구분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쿠퍼는 미국이 어떤 점에서는 '포스트 모던'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미국은 압도

21) *Economist*, 1997/December/20, p.42.

적인 힘의 우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함께 멸망하는' 위험성을 절감할 수 없고, 따라서 주권을 양보하려는 의사도 없다고 보았다.

그럼 탈냉전 시대의 세계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겠는가? 우선 앞에서 말한 첫 번째 유형인 '전근대 (pre-modern)' 국가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들 국가(혹은 정부)는 아직 베버(Max Weber)가 얘기한 이른바 '폭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즉, 너도나도 정부에 불복하고 군대를 조직하여 내전을 일으키는 그런 상태이다. 따라서 이런 나라(혹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원시시대와 마찬가지로 '혼란'과 '질서' 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야만 한다. 그러나 고대와 다른 것은 오늘날에는 '제국'을 건설함으로써 질서를 창조하려는 국가나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토지는 더 이상 국력의 근원이 아니며 많은 인구는 단지 통치자에게 부담만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살, 내전에 대한 외부의 간섭은 형식에 그칠 것이고, 이런 지역의 사람들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유형인 '현대' 국가는 국가의 주권을 최고의 가치로 믿기 때문에 당연히 타국의 국내 업무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 폭력을 사용하여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욕망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국가는 전통적인 '힘의 균형'의 메커니즘을 적용함으로써 견제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 각 지역에서 '힘의 균형'의 메커니즘은 점점 순조롭게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이 개입해야만 일부 지역의 강권을 억제할 수 있다.

쿠퍼는 특히 강조하기를, '현대' 국가는 내부 결집력이 강하고 조직적일수록 위험하며, 팽창성을 가지고 있고, '전근대' 국가는 이와 반대로 이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수록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는가? 우선 '전근대' 국가의 전쟁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종류의 전쟁은 내부적인 사무이며, 다른 나라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현대' 국가나 '포스트 모던' 국가가 이러한 혼전에 개입을 한다면 여기에 발목이 잡혀 스스로 빠져 나오지 못할 경우를 걱정해야 하며, 개입된 나라는 각 집단의 공격 목표가 될 우려가 있다(소말리아에서의 미국의 경우처럼).

'현대' 국가는 '전근대' 국가에 비해 훨씬 안정적이다. 그러나 이것이 평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근대' 국가가 '혼란'과 '제국(질서)'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현대' 국가는 '제국(패권)' 과 '힘의 균형'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런 국가들은 만약 자국이 압도적인 우세를 점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적어도 지역적인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시도할 것이지만 보통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이때 이들은 '포스트 모던' 국가와 유사한 조직을 건설하려 시도할 것이고, 일반적인 '현대' 국가의 '힘의 균형' 메커니즘과 비교할 때 보다 많은 국내업무에 대한 간섭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노력

이 실패한다면 지역적인 강대국의 패권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포스트 모던’ 국가는 반드시 ‘현대’ 국가의 공격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 그들은 아마 간접적으로 심지어 직접적으로 팽창적 성격을 가진 민족국가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포스트 모던’ 국가 사이에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이 연합 작전을 포기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쿠퍼는 유럽 정부가 직면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어떻게 전쟁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전쟁은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믿고 있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전부의 군사력 유지를 지지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 쿠퍼는 ‘포스트 모던’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가 최고의 가치가 되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개인주의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는 국가의 해체, 더 나아가서 사회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²²⁾.

이상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언급한 관점과 헌팅턴의 “문명충돌론” 관점을 비교해보면 양자 모두 서구 국가가 다른 지역에 대한 간섭을 자제할 것을 건의하고 있으며 고립주의적인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헌팅턴이 제시한 이유는 첫째, 서구의 실제 역량이 부족하고, 둘째, 서구가 비록 다른 지역의 민주화에 노력한다 하더라도 비서구 국가는 민주화 될수록 오히려 더 반서구적일 것이므로 불필요하게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현대 국가’는 주권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침범을 받으면 충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스스로 말썽을 자초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을 보였다. 유럽 연맹이 UN이 중국의 인권 문제를 견책하는 어떠한 결의안에도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²³⁾ 어느 정도는 이런 사고방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자 모두 비서구 국가에 대해 경계의 태도를 가질 것을 주장하고 있다.

왜 비서구 국가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것일까? 헌팅턴은 문명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타협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고, ‘이코노미스트’지는 ‘현대’ 국가는 공격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필자는 이 두 가지 추론이 모두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헌팅턴이 지적하기를, 서구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어떻게 영토나 세력을 확장했는지를 잊어버렸고 그런 것은 서구의 사상, 가치관 혹은 종교가 우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서구인들이 스스로 따른 결과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비서구인들은 그들이 서구의 제도와 가치관을 받아들인 것은 폭력의 결과임을 결코 잊어본 적이 없다.²⁴⁾ 따라서 그가 보기에 서구가 몰락하고 비서구가 강해질 때, 비서구는 똑같은 방식으로 서구에게 행동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하였다. 즉 헌팅턴은 비서구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22) *Economist*, 1997/December/20, p.43

23) 中國時報(臺北), 1998年 2月 24日, p.9.

24) Sameu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 and the Remarking of World Order*, p.48.

'이코노미스트'지 역시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유럽의 민족국가들이 강성해 진 후, 외부로의 확장을 피했고 경쟁적으로 해외 식민지를 늘려갔다고 보았다. 같은 이유로, 원래의 식민지들도 속속 건국(state building)을 하고, 민족국가(nation state)를 건립한 다음,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추진력으로 외부로 확장해나갈 것을 시도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코노미스트지는 조직적이고 질서가 있는 '현대' 국가일수록 더욱 위험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서구 국가들은 '현대' 단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침략자이면서 위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력이 나날이 강해지는 국가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거나, '중국위협론' 류의 논조 등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헌팅턴이나 '이코노미스트'지 모두 서구 국가의 전투의지가 약화되는데 대해 우려를 감추지 못했으며, 단결과 우세한 군사력의 유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 것 등을 호소했다.

IV. "민주 평화이론"-- '민주'국가 대 '비민주'국가의 구도

탈냉전 시기의 국제관계를 토론할 때, "문명충돌론"과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토론과 논쟁을 불러일으킨 학설은 "민주 평화이론(Democratic Peace Theory)"이었다. 이 학설은 비록 헌팅턴같은 대표적 인물로 인해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학계와 정치계 인사들에게 더 깊은 영향은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적 평화이론"의 사상적 근원은 칸트의 『영원한 평화(Perpetual Peace)』로까지 거슬러올라갈 수 있다. 그는 이 책에서 공화제 헌법의 견제 작용은 모험적인 통치자가 국가를 전쟁으로 몰고 가는 것을 저지할 수 있고, 모든 공화제 정부가 공통적으로 따르는 국제법이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을 피할 수 있으므로 입헌제 공화국은 당연히 평화주의적이라고 보았다.

이 사상을 이어받고 또 2차대전 후 서구 민주국가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는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70년대와 80년대부터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전쟁'과의 상관 관계에 대한 논술들이 출현하였지만²⁵⁾ 그다지 주목을 끌지 못하다가 90년대에 이른 후에야 이의제는 갑자기 학계의 관심을 끌었고 불과 몇 년 사이에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문이 수십 편 발표되었다²⁶⁾.

25) 조기의 대표적 논술로는 M. Small and J.D Singer, "The War-Proneness Of Democratic Regimes," *Jerusalem Journal of Internationals*, Vol. 1, No.1(1976) ; M.W. Doyle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Part one",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Vol.12, No.3(1983) 등이 있다.

26) 대표적 논술로는 R. Cohen, "Pacific Unions : A Reappraisal of the Theory that Democracies do not Go to War with Each Other,"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20, No.3(July

“민주 평화이론”의 주된 논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민주 국가 간에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 간에 갈등이나 충돌이 있을 때에는 자기 억제와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그러나 민주 국가와 비민주 국가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을 때에는 비민주 국가처럼 호전적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출해 낼 수 있는 결론은 민주 국가 간에는 하나의 ‘평화지대(peace zone)’가 형성되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면 평화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처음으로 이러한 ‘평화지대설’을 발표해 주목을 끈 것은 1983년 발표된 Doyle의 논문이었다. 그는 이 글에서 ‘분리된 평화(separate peace)’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는 첫째, 안정된 헌법 제도를 가진 민주국가는 지금까지 다른 민주 국가에 전쟁을 발동한 적이 없다: 둘째, 그렇지만 비민주 국가와 교류를 할 때, 민주 국가는 비민주 정권과 마찬가지로 호전적이 되며 침략성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하여 Doyle은 ‘분리된 평화(separate peace)’의 개념을 얻어냈고, ‘평화의 범위는 단지 민주 국가 사이로 제한되며 그 범위를 초월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²⁷⁾

이 주장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끌었으며, 특히 냉전 후 많은 연구 의제들은 자유 민주주의가 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것이었다. 그중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Bruce Russett의 “*Grasping the Democratic Peace*”이었다²⁸⁾. Russett는 Doyle의 관점을 이어나가 민주 국가와 전제 국가를 포함하고 있는 국제관계구도에는 동시에 ‘평화지대(즉 민주국가 사이의 관계)’와 ‘전쟁지대(기타 국제관계)’를 포함한다고 주장했다.²⁹⁾ 이 주장은 민주 국가간의 관계와 기타 국제관계의 구분을 더욱 뚜렷이 했다.

이러한 분리 현상을 논증하기 위해 “민주 평화이론”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해야만 한다. 첫째, 자유주의의 국제관계 이론에서 합리적인 해석을 유도하여 왜 자유주의 원칙이 민주국가가 다른 민주 국가에 대해 평화를 유지하게 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둘째, 이런 자유주의 원칙이 비민주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같은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논증해야 한다.

1994): C. Layne, “Kant or Cant : The Myth of the Democratic Peace.” *International Security*, Vol.19, No.2(Fall 1994): D. Spiro, “The Insignificance of Liber Peace,” *International Security*, Vol.19, No.2(Fall 1994): J.M. Owen, “How Liberalism Produces Democratic Peace.” *International Security*, Vol.19, No.2(Fall 1994) : C.T. Morgan and S. Howard Campbell, “Domestic Structure, Decisional Constraints, and War: So Why Kant Democracies Figh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35, No.2(June 1991): N. Gleditsch, “Democracy and Peace.”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29, NO.4(1992): A. Mintz and N. Geva, “Why Don’t Democracies Fight Each Other : An Experimental Study.”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37, No.3(Sept.1991) 등이 있다.

27) M. Doyle, *ibid.*, pp.213-225.

28) Bruce Russett, *Grasping the Decocratic Peace*(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29) Bruce Russett, *ibid.*, p. 32.

민주국가는 헌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전쟁을 제한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평화에 가깝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제한적 요소의 대부분은 전쟁을 피하려는 사회적 바람에서 비롯된 것이지 상대가 어떤 국가냐 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유주의의 원칙은 마땅히 보편적이어야 한다. 민주국가간에 전쟁의 발발을 제한하는 메커니즘은 민주 국가와 비민주 국가의 관계에도 적용되어야 옳다.

Russett은 민주 국가의 구조적·제도적인 메커니즘 때문에 정부가 전쟁을 발동하려는 의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이는 민주 국가 내부에 있는 전쟁을 제한하는 '제도(constitutive)'적 요소이다. 그러나 그는 이보다 '상호 작용(interactive)'적 요소의 역할을 더 강조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민주제도의 운영은 상대방이 민주정부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이 느리기 때문에, 만약 마찰이 발생한 상대방도 민주 정부라면 지도자들은 상대방의 정책 결정 과정 역시 자국과 마찬가지로 느리게 진행될 것이라 판단하여 갑작스런 공격을 발동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평화적 수단을 모색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상대가 전제 정부라면 지도자는 상대의 정책결정 과정이 자국처럼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먼저 공격적 행동을 취해 상대의 갑작스런 공격을 피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비민주 국가의 지도자는 민주국가의 무력사용 능력이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빌미로 더 큰 양보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민주 국가로 하여금 양보가 아닌 폭력을 먼저 사용하게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³⁰⁾.

Russett는 더 나아가 왜 민주 국가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규범과 가치가 비민주 국가에는 보급되지 않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민주국가의 국민들은 자국에 시행되는 민주제도의 권리와 규범, 예컨대 평등한 공민권, 합의에 기초한 통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메커니즘 등이 다른 나라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 민주제도의 특징이 겉으로 표출되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국가와 국가의 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민주 국가의 국민들은 자신들은 평화와 타협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또 다른 민주 국가의 국민들 역시 같은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쌍방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양국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예측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즉 민주 국가들은 상대방의 정치 체제를 존중할 줄 알고, 가능한 한 서로를 이해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 민주국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비 민주국가의 정부는 자기 나라의 국민에게도 공격적이며, 민주국가에 적용되는 규범이 결코 비 민주국가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관계에 있어서 그들은 민주국가의 의혹을 살 수 있고, 민주국가는 비 민주

30) Bruce Russett, *ibid.*, p. 39.

국가 상호존중이라는 규범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민주국가는 공격성을 지닌 비 민주국가들에게 자신들의 온화한 본질을 이용당함으로써 소멸되지 않기 위해 더욱 강력한 국제적 행동규범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³¹⁾

이러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황당한 결론을 도출해 낸다. 즉, '만약 민주국가와 비 민주국가 사이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부당한 쪽은 항상 비 민주국가이고, 설령 민주국가가 먼저 군사행동을 취한 침략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전제국가의 피해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방위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이다.'³²⁾

"민주평화이론"의 주요근거는 위에서 말한 자유주의 원칙이외에도 2차 대전이후에 서방국가들간에는 전쟁이 없었다는 경험적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현상이 전적으로 이들 국가의 정치체제 덕분일까? 현실주의자들은 이는 바로 그들이 공동으로 소련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서로의 갈등을 접어둔 것이며, 이들 국가의 민주주의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자유주의자는 이것이 이들 국가 간의 경제가 고도로 융합된 결과라고 볼 것이다. 즉 서방국가들간의 경제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의존의 정도가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간의 갈등이 전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어느 학자는 '민주평화이론' 주장자들의 오류는 '민주국가'와 '자유주의'를 혼동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즉 경제협력과 상호의존의 기제로 인하여 자유주의가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자유주의의 기제가 결코 민주국가의 전유물은 아니며, 비 민주국가도 똑같이 이러한 기제를 통하여 민주국가와 평화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³³⁾ 또한 자유주의가 민주국가내에서 역할을 발휘하는 상황은 결코 불변하는 것이 아니며 국내외의 여론 환경, 정치적 동향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자유주의의 효력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빅토리아시대의 폭넓은 자유주의의 분위기는 유럽에 평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의 사회다윈주의(Social Darwinism)는 각국의 대외정책에 깊이 영향을 주었고 유럽 전역의 자유주의 정신을 쇠퇴시켰다. 1950년대와 60년대의 긴장된 이념의 대치상태는 미국의 매카시즘 및 자유주의이념과 배치되는 대외정책을 양산했다. '민주적 평화이론'자들이 민주국가의 대외정책이 반듯이 자유주의이념을 대표한다고 가정하고 민주국가도 자유주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는 현실을 무시한 것은 자유주의의 원래 의미를 크게 왜곡한 것이다.³⁴⁾

31) Bruce Russett, *ibid.*, pp. 32-33.

32) John Macmillan, "Democracies Don't Fight: A Case of the Wrong Research Agenda?"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2, No. 3 (July 1996), p. 290.

33) John Macmillan, *ibid.*, p.292.

34) John Macmillan, *ibid.*, p.295-296.

오늘날 '민주평화이론'의 주요 의의는 그것이 미국 외교정책의 이념적 근거가 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1994년 클린턴 대통령은 국정 연설에서 "민주국가들간에는 전쟁이 없었으며 이것이 바로 미국이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추진시키고 있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러한 관점은 전적으로 앞서 말한 '민주평화이론'의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헌팅턴의 '서구는 독특하지만 보편적이지 않다(The West, Unique, Not Universal)'가 발표된 동일 호의 *Foreign Affairs*지에서 헌팅턴의 글 바로 다음으로 Strobe Talbott 당시 미 국무차관이 발표한 '민주주의와 국가이익(Democracy and National Interest)'이 있다.³⁵⁾ 이 글은 "민주평화이론"과 오늘날 미국의 외교정책의 관계를 잘 설명해 줬다.

비록 그의 글은 헌팅턴의 "문명충돌론"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매우 분명하게 헌팅턴류의 논점을 겨냥했다. 글의 서두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일부 소위 현실주의자들이 미국이 해외에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행동(예를 들어 아이티, 보스니아에 파병하여 선거 진행 감시)은 미국에게 골치 덩어리만 가져다 준다고 비난하고, 미국이 타국의 내정에 관여할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한다는 주장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Talbott은 시장이 날로 글로벌화되고 지역간의 상호의존이 더욱 심화, 확대되고 있는 오늘날, 이러한 '현실주의'적인 태도야말로 시대에 맞지 않으며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Talbott은 설명하기를 "과학 기술, 상업, 정치의 큰 흐름 하에서 각 국가는 모두 대외 개방을 하고 그 거리를 좁히면서 폭넓게 교류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상품과 서비스를 빠르게 유통시킬 수 있지만 병균, 마약, 범죄, 테러, 생태오염 또한 그와 함께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국가와 국가가 상호 의존하는 세계에서, 다른 국가가 어떻게 자국을 관리하고 통제하는지에 대해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더욱이 당연한 일이다". 그는 국제사회가 갈수록 더 많은 민주정부로 구성되면 미국의 안전과 번영은 더욱 더 보장될 것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민주국가는 테러를 반대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더욱 잘 준수할 수 있고, 또 전쟁도 안 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정부 관료의 신분으로 Talbott은 남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미국중심주의를 보여 주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 국민은 지금까지 지정학이나 힘의 균형의 개념을 받아 드린 적이 없다. 미국의 해외파병은 단지 미국의 국가이익만을 위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민주주의를 널리 보급하고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의 건국 이념과 이상은 13개 주(州)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다."

그 다음, 그는 일부 '반민주'적인 관점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과학기술의 진보는 민주주의를 촉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어떤 견고한 장벽

35) Strobe Talbott, "Democracy and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75, No.6, (11/12,1996), pp. 47-63.

도 전보, 팩시밀리, 전자우편, 인터넷의 침투를 막을 수 없다”. 또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관계에 대해서 그는 “권위적인 정치체제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명제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실례를 열거하면서 일부 낙후됐던 나라들이 민주제도를 실시한 후 더욱 국민의 복지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³⁶⁾

그는 헌팅턴의 “제3의 민주화 물결”의 논점을 이어가면서, 1980년대 이래 민주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특히 냉전이 종식된 후에는 그 전망이 더욱 밝다고 보았다. 냉전 이후의 러시아, 동유럽, 캄보디아, 보스니아에서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선거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가장 좋은 민주화의 증거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그는 “어떤 민족이나 문화는 민주주의에 적합지 않다”는 주장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물론, 그도 역시 위에서 말한 ‘민주화 물결의 증거’들이 그리 순조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미국과 기타 민주 국가들이 더욱 협력하여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이 민주주의의 뿌리가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미국의 지원이 이 국가들의 지속적인 민주화에 빼놓을 수 없는 관건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중국의 민주화에 대해서도 자신만만했다. 중국인들은 이미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자유로워졌지만 더욱 더 좋아져야 하고 또 더 좋아 질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중국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은 바로 경제, 문화적으로 ‘개입’(engagement)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민주주의가 히틀러 혹은 급진민족주의자를 선출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나라 국민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 설령 민족주의성향의 정당이 승리한다해도 그것은 민주화의 과정에 있어 가장 최고의 선택이다. 왜냐하면 대중적 기반을 가진 지도자가 만약 표로서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민주주의는 오랜 과정이다. 미국도 똑같이 이러한 과정을 겪어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그는 미국의 외교 정책 방향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세계가 미국을 지도국가로 여겨온 이유는 단지 경제, 군사력 때문은 아니고 우리 국내에서 적용되는 원칙과 가치를 똑같이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확산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외교정책도 지속적으로 민주주의의 추진에 힘쓸 것이다. 더 민주화된 세계만이 미국인을 더욱 안전하게 할 것이다.”³⁷⁾

이러한 외교정책에 대하여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다.

Mansfield와 Snyder는 자신들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³⁸⁾ “과거

36) Strobe Talbott, *ibid.*, pp. 51-52.

37) Strobe Talbott, *ibid.*, pp. 62-63.

38) Edward D. Mansfield and Jack Snyder, “Democratization and War.” *Foreign Affairs*, Vol. 74.

200년 간의 통계자료를 보면 민주화의 과도기에 있는 정권은 안정되고 변화가 적은 정권(서방 민주국가정부 혹은 집권적인 專制정부)에 비해 훨씬 더 호전적이며, 특히 전(前) 공산국가들은 더욱 그렇다. 이것은 민주화의 과정에서 거의 예외 없이 민족주의(내셔널리즘)를 통해서 군중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보급이 반드시 평화를 확산시킨다고는 볼 수 없다. 더욱이 핵무기를 보유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민주주의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민주주의를 주장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들은 이러한 과도기의 혼란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화된 국가가 어떻게 순탄히 과도기를 헤쳐 가느냐에 대하여 저자는 국제사회가 이 국가들을 위해 자유로운 경제무역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제안한다.³⁹⁾ 그들이 지적하기를 “1920년대 일본과 독일이 민주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열강들은 역시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환경을 제공해주었기 때문에 내셔널리즘은 발붙일 곳이 없었다. 그러나 1930년대 경제공황과 자유무역환경의 부재로 인해 이 두 국가는 곧 파시스트 국가가 되고 말았다. 중국의 경우를 본다면 중국이 경제적으로 서방과 관계를 가지기 시작한 것은 민주화의 한 계기라 할 수 있다. 서방국가들은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중국이 더욱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⁴⁰⁾

*Foreign Affairs*지의 집행주간인 Fareed Zakaria는 ‘반(反)자유적’ 민주주의현상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⁴¹⁾ 그는 일부 신흥민주국가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된 지도자들이 오히려 권력을 확대하고,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침범하는 등 호전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반자유적 민주주의 (illiberal democracy)’라고 불렀다. 한 예를 들어 베오그라드의 학생이 세르비아의 급진민족주의 지도자 밀로세비치에 대해 항의 시위를 했는데 그 것은 그가 호전적이어서가 아니라 전쟁에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Zakaria는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가 평화를 촉진한다는 신화를 부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다.⁴²⁾

‘민주’와 ‘자유’는 다른 범주의 개념이다. 즉, ‘민주’는 정부를 만들어 내는 한 수단이다.

No. 3. (1995) , pp. 79-97.

39) 이것은 국제적 측면에서의 제안이다. 국내적인 측면에서의 안정 방안에 대하여 저자는 두 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는 구세력, 기득권자에 대해 급진적이고 궁지에 몰리게 하는 식의 청산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여러 가지 다른 이념에 대하여 자유롭고 개방적인 환경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여론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see Edward D. Mansfield and Jack Snyder, *ibid.*, pp. 95-97.

40) Edward D. Mansfield and Jack Snyder, *ibid.*, p. 97.

41) Fareed Zakaria, “The Rise of Illiberal Democracy,” *Foreign Affairs*, Vol. 76, No.6 (1997), pp. 33-43.

42) Fareed Zakaria, *ibid.*, p.35.

그 가장 주요한 방법은 선거를 치르고 권력의 분립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자유'이다. '자유'는 국가나 정부 혹은 기타 외부의 힘의 억압을 받지 않도록 개인의 각종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것을 뜻한다. '자유'의 본질은 권력의 분산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는 오히려 항상 일종의 절차를 통해 권력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즉, 유권자 개개인에게 분산되어 있는 권력을 대표자에게 집중시키는 것) 과거의 사상가들은 이 두 개념의 상호 포용적이면서도 상호 대립적인 이 양면성에 주목했다. 18, 19세기 정치사상가의 관심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대립을 피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수결에 의한 독재정치'(tyranny of the majority)와 같은 개념이 고전 자유주의 사상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Zakaria는 1945년 이후 서방국가들은 이미 동시에 '자유'와 '민주'를 실현할 수 있었으나 다른 국가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그의 글을 통해 그는 '민주'보다 '자유'를 더욱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국민의 풍요로운 생활환경, 자유, 행복감이 '반자유적 민주주의'를 더욱 많이 실현하고 있는 국가, 예를 들어 가나, 슬로바키아의 국민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다. 또한 홍콩이 백여년간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다수의 민주국가들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⁴³⁾

Zakaria는 한 국가에서 투표와 선거를 실시하기는 매우 쉽지만 그 사회에서 '자유'를 실현한다는 것은 오히려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미국이 민주주의를 널리 전파시킨 결과로 '반자유적 민주주의'를 양산할 가능성이 '자유민주주의'의 가능성보다 훨씬 많다고 본다. 더구나 민주적인 선거를 거쳤기 때문에 '반자유적 민주주의'정권은 합법성과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가 여러 가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를 함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민주제도에 대해 회의론을 갖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는 이것이 '제3의 민주화물결' 이후의 '제3의 민주화 퇴조'를 낳게 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그는 미국이 새로운 곳을 찾아 민주화를 보급하거나 선거를 실시하는데 힘쓰지 말고 기존의 민주제도가 있는 곳에서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자유입헌정치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건의했다.⁴⁴⁾

이 두 가지 관점은 어느 정도 "문명충돌론"의 관점과 비슷하며, 두 관점 모두 민주제도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클린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그러나 이 것이 과연 '민주평화이론'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으로 이어 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민주평화이론"은 민주국가간에는 전쟁이 없다는 것을 경험적 근거로 삼았다. 때문에 이

43) Fareed Zakria, *ibid.*, p.41, 29.

44) Fareed Zakria, *ibid.*, p.42-43.

에 대한 많은 비판은 서방의 민주국가간에도 전쟁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초점을 두었다. 이것은 바로 '민주국가'의 정의가 무엇이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이에 대한 '민주평화론'자들의 대응방식은 전쟁을 하는 쌍방 중에 최소 한 쪽을 '민주국가'의 범주에서 배제시키면 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Mansfield & Snyder 및 Zakaria의 주장은 민주국가의 범위를 사실 더욱 축소시키는 것이고 "민주주의" 앞에 '성숙된', '안정된', '자유로운'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민주국가"의 조건에 진정으로 부합되는 국가는 1945년 이후의 서방국가들 뿐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1945년 이후에 이들 국가 간에는 실제로 전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전쟁의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것은 "민주평화이론"의 주장을 더욱 지지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V. 결 론

이상 개괄적으로 세계에 대한 일부 서방국가사람의 세 가지 이분법을 소개하였다. 삼자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그들이 구분 지어 놓은 결과가 완전히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소위 '서방국가', '포스트 모던'국가, '민주국가'는 사실 같은 국가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들이 가상의 적으로 간주하는 상대방 또한 대체로 비슷한 국가들이다. 이로써 그들은 '서방세계'와 '비 서방세계'의 대치 구도를 그려낸다. 따라서 '문명충돌론'이든 '민주평화이론'이든 결국은 서방중심주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서방국가의 입장에서 세계를 보는 것이고 그 목적은 서방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이런 위협을 상대해야 하는가에 관한 정책논의에 있어서는 '간섭'과 '불간섭'이라는 차이가 생겨난다.

헌팅턴이 먼저 발표한 "문명의 충돌?"은 비 서방 문명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서방세계가 군사상의 우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 외에도 다른 문명권의 국가 사이에서 서구문명의 가치에 공감하는 집단을 지지하고 양성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⁴⁵⁾ 이것은 간섭정책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후에 출간된 『문명의 충돌과 세계 질서의 재건』에서 그는 "서방세계가 다른 문명세계를 간섭하는 것은 세계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근본적 원인이 된다"⁴⁶⁾ 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서방세계의 관여를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문명충돌론'은 문명간의 차이와 타협 불가능을 강조하고 가상의 적을 상징하고 있기 때

45) Sameu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 p.49.

46) Sameu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 and the Remarking of World Order*, p.435.

문에 충돌을 조장하고 전쟁을 선동하고 있는 인상을 주었다. 헌팅턴이 문명충돌의 가능성을 과도하게 강조했기 때문에 독자들은 서구세계의 간섭을 반대한다는 그의 의견을 소홀히 넘겨버렸거나⁴⁷⁾ 혹은 그것을 단지 위선일 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민주평화이론'을 제기한 자들은 처음에는 민주국가간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현상을 설명하고 이러한 관점의 정확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학계의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광범위하게 해석되어 미국이 해외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확장시키는 근거가 되었다. 이로서 미국은 90년대 후반 일련의 군사행동을 일으켰으며 해마다 "세계인권백서"를 발표하여 외국의 내정을 적극 관여하고 있다.

"문명충돌론"이든 "민주평화이론"이든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모두 기분이 안 좋은 학설이다. "문명충돌론"에서는 중국을 모든 가치관이 다른 이질적인 문명으로 묘사하였고 또 서방세계와의 충돌을 예언하였다. "민주평화이론"에 따르면 중국은 비민주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아니면 과도기 국가이기 때문에) 공격성이 있고, 따라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론은 또 실제로 거세지고 있는 서방세계의 "중국위협론"을 더욱 설득력 있게 하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문명충돌론"이나 "민주평화이론"은 모두 논리와 증거가 빈약하고 허점이 많은 이론이다. 하지만 이것이 많은 서방세계 사람들의 생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중국 같은 나라는 타국이 자국의 민주, 인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을 내정간섭으로 보고 늘 불만을 품고있는 것도 역시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은 비록 대 태러 전쟁으로 그런 모순이 잠시 수그러들었지만 이러한 서방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존재하는 한 충돌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 "Foreign Policy-Not Quite a New World Order. More a 'Three-Way Split.'" *Economist*, 1997/December/20
- Bernstein, Richard. & Munro, Ross H. *The coming conflict with China* (New York : A.A. Knopf, 1997)

47) 헌팅턴은 "독자들은 '문명의 충돌?' 이 글의 표제에 있는 커다란 물음표를 보지 못한 것 같다"고 원망하였다. Sameu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 and the Remarking of World Order*, 서문.

- Doyle, M.W.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Part one".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Vol.12, No.3(1983)
- Harding, Harry. *A Fragile Relationship -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ince 1972* (Washington : Brookings Institution, 1992)
- Huntington, Sameul P. *The Clash of Civilization and the Remarking of World Order*. (New York : Simon & Schuster, 1996)
- Huntington, Sameul P. *The Third Wave : Democratization in the Last Twentieth Century* (Norman :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 Huntington, Sameul P. "If Not Civilization, What? Paradigms of the Post-Cold War World." *Foreign Affairs*. Vol.72, No.5(11/12 1993)
- Huntington, Sameul P. "The Clash of Civilization?" *Foreign Affairs*. Vol.72, No.3 (summer, 1993)
- Huntington, Sameul P. "The West, Unique, Not Universal." *Foreign Affairs*. Vol.75, No.6(11/12, 1996)
- Macmillan, John. "Democracies Don't Fight: A Case of the Wrong Research Agenda?"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2, No. 3 (July 1996)
- Mansfield, Edward D. and Snyder, Jack. "Democratization and War." *Foreign Affairs*. Vol. 74, No. 3, (1995)
- Russett, Bruce. *Grasping the Democratic Peace*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Talbott, Strobe. "Democracy and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75, No.6. (11/12, 1996)
- Zakria, Fareed. "The Rise of Illiberal Democracy." *Foreign Affairs*. Vol. 76, No.6 (1997)
- 王緝思 主編, 『文明與國際政治－中國學者評亨廷頓的文明衝突論』(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5)